



특별기고-2

# 4월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 배 옥 병 |

## 1. 학교급식의 역사와 현황 개요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1953년 캐나다 정부가 원조한 분유를 결식아동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작된 이후 1981년에 학교급식법을 제정하고, 1995년부터 중고등 학교 급식을 부분적으로 시작하였다.

1996년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 공포(1996.12.30, 제5236호)됨에 따라 외부 위탁급식 업체에 의한 학교급식이 허용되고, 직영급식 원칙이 무너지게 되었다.

학교급식의 전면 확대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 방향으로, 특수학교는 1992년에, 초등학교는 1998년에 전면 급식을 이루어졌으며, 중학교는 2002년 12월 현재 88.7%의 급식률을 보이고 있어, 초·중·고 특수학교를 모두 합하여 평균 96.4%의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 7월 기준으로 초중고 및 특수학교 10,343개교에서 7,035천여명의 학생이 학교급식을 먹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7에 넘는 숫자이다. 급식경비는 연간2조 8,531억원이다.

최근 위탁급식 업체가 공급하는 학교급식으로 인한 급식사고가 급증하면서,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게 되고, '학교급식법 개정,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학교급식 전국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의 급식개선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직영급식', '안전하고 우수한 국내산 농산물 공급', '점진적인 무상급식 확대'를 기조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학교급식에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급식조례 제정 청원 운동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2.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원인

### 1) 식중독 발생률의 급증

전국적으로 위탁급식학교는 18.8%인 반면 서울의 경우 중학교 362개교 중 4개교, 고등학교289개교 중 14개교만 직영을 운영하고 있어 식중독 발생건수가 서울집중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위탁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는 예견된 인재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한 업체가 여러 학교와 계약을 함으로써 동일한 식단이 동시에 공급되고 식재료 공급업

# 우리농산물, 직영급식, 무상급식 급식법개정하자!

체 또한 여러 업체에 같은 재료를 납품함으로써 대형 식중독사고가 유발하게 된 것이며 위탁급식업체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낮은 가격의 수입품 혹은 저급한 식재료 사용이 불가피하다. 1996년 2800명에서 2001년 64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2003년 상반기에는 위탁급식 학교의 식중독 발생률이 직영에 비해 18.8배에 이른다. 2003년 3월에는 같은 날에 10여 개의 학교에서 1,8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일시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바이러스 때문이라 하나 사고 원인 제공 업체가 밝혀지지 않았음) 전체 식중독 환자 중 학교급식을 통해 발생한 환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업체는 운영경비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급식 인력을 확보하지 않거나 비정규직 채용 등으로 고용 및 작업환경불안을 심화함으로써 위생관리 등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급식운영과 급식비결산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위탁급식은 그 자체가 교육이 아닌 경제행위이므로 실제 교육목표에 준한 급식을 실시할 수 없다.

## 2) 취약한 식재료 안전성: 수입산 식자재 남용

정부당국은 2000년 2월 서울시내 130개 학교 중 무려 98개의 학교에서 폐기처분해야 할 저질 불법 쇠

고기가 공급되어 온 것을 적발했으며, 2001년 7월에는 287개 식품·원료 납품업체를 시설위반과 무허가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2001년 12월 젓소를 한우 고기인 것처럼 속여 4년간 초등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해온 축산물 판매업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직영보다 위탁급식에서 수입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육류, 채소류, (상추, 숙주나물, 삶은 시금치 등이 중국산 농산물 최근 급증) 어패류 순서로 수입산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류 중에서는 쇠고기의 수입산 사용이 많으며, 위탁급식학교의 절반이상(55.9%)은 수입쇠고기를 90%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학교급식 개선 운동의 의의

### 1) 학교 급식 개선 운동의 의의와 목표

급식개선 운동의 핵심 슬로건은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급식을 먹이자'는 것이다. 농업 시장이 개방되고 우리 농업의 구조도 기업농화 되어 가면서 방부제나 농약 성분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식품, 정채 모를 첨가물들이 가미된 가공식품, 수입된 유전자 조작 식품 등이 우리의 밥상을 점령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만은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여 우리 아이들이 최고의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학교급식법개정과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정운동은 (전국 시도 군 구 100여개 조례제정 운동본부 조직) 먼저, 아이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동으로,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하는 운동이자 아이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이다. 둘째, 안전한 우리 농축수산물 사용을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무너져 가는 우리 농축수산업을 회생시키고 농어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키워주는 운동이다. 셋째, 서구화된 입맛을 되돌리고 우리 먹거리 문화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학교에서 시작된 급식개선 운동의 성과는 저렴한 가격에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가정에서도 먹을 수 있게 할 것이다. 넷째,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일어서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움직여 자치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풀뿌리 자치를 배우고 몸에 익히는 운동이다.

## 2) 우리는 급식법개정에서 왜 우리 농산물을 주장하는가?

전국적인 현상은 먹을거리와 교육을 함께 보는 관점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적 자치활동으로서 지역을 특화하고 삶의 질과 교육복지를 지역자치로서 해결하려는 시민의식의 팽창되었다. 안전하고 질높은 급식을 위한 급식재료 사용 규정은 단순한 우리 농산물에서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의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생산, 공급, 소비의 과정에서 철학이 내재한 교육으로 도시, 농촌 간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는 순환형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관리와 유통까지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있다.

교육으로서의 안전한 급식을 요구하기에 이로부터 파생되는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지역경제순환까지 자연스럽게 교육하고 학교급식의 교육이념을 정상화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의 교육과 경제를 책임지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주민권리를 표현하고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의 방향은 가정과 연계되어 교육을 통해 우리농산물 소비를 자연스럽게 연장하면서 '우리 것'을 지키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건강과 생명의 천부인권적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 3) 학교급식은 영리목적이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직영이어야 한다.

학교급식은 공교육이라는 본래 목적과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가 위탁급식을 하려는 것은 공교육을 위한 국가교육 철학이 부재한 시각적 접근에 의해 교육을 경영과 경제의 논리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평가된다. 교육의 본질을 배제하고 "한 끼 먹는 일"로 급식을 규정하면서 기업의 본질은 이윤추구임을 외면하며 교육현장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학교급식은 학교가 운영하고 이윤추구가 배제된 직영 급식이어야 본래의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목적과 취지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

## 4) 우리는 왜 무상급식을 주장하는가?

저소득층 자녀에 급식비지원은 복지국가로서의 당연한 업무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법의 준거가 되는 헌법상에도 의무교육기관에서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교육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교육의 패러다임을 고쳐야 한다. 아이들이 먹는 것은 무조건 최상이어야 하며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평등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부자 집 아이를 국가가 거저 먹여 키워야 하나?"는 논리로 무상급식을 부정하면서 소위 색깔론적 시각으로 접근한다. 무상급식의 원칙은 색깔론이나 외식비 지불 같은 경제론과는 무관하다. 다만 헌법에 준한 교육기본 권리인 것이다. 민동연